

G20

그들만의 잔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8~9면

단독 현지 취재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 9, 16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②

베네수엘라 혁명의
교착 상태

▶ 12면

국제

그리스 총파업 /
타이 민중 항쟁

▶ 6면

노동자·학생 투쟁

철도/화물/건설/
전교조/공무원/중앙대 ...

▶ 3, 4, 13면

발행인_김관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호)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남창동 206-146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7

Left21.com

2010년 4월 24일 ~ 5월 7일 | 제30호 | 값 1,800원

레프트21

간첩 사건 발표
천안함 북한 연루설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북풍’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이명박

» 관련 기사 2, 3면

천안함 침몰

근거도 못 대는 북한 관련설 유포 말라

군부와 우파는 지금 ‘침단 기능을 지닌 북한 잠수함이 귀신같이 서해로 들어와 한 방에 천안함을 두 동강 낸 후 갑작같이 빠져나갔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우파의 추정은 너무나 허접이 많다. 어뢰가 폭발했다면 생존자 중에 고막을 다치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생존자들이 폭발로 물벼락에 젖어야 한다. 폭발 당시 화염 때문에 물고기의 폐죽음이 나타나야 한다. 사고 당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에서 열기가 감지돼야 한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이 지금 사실상 선전포고와도 같은 무모한 도발을 할 필요나 그를 통해 얻을 이익 어느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모순투성이 추정은 생존자 기자회견, 함미 인양과 절단면 공개, 민군합동조사단의 잠정 발표 등을 거치며 거의 사실인 양 굳어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군부가 그 방향으로 조사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은 ‘카더라’식 보도로 여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의문사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엄청나게 과장한다. GDP나 군비 예산 규모가 남한의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스텔스 기능, 버블제트 기술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의 지적처럼 “북한 연루설은 급기야 북한을 뒤흔들 수 있는 무한능력의 ‘괴물’로 만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북 스탈린주의 좌파도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한다. 예컨대 〈자주민보〉는 “국군은 인민군에 사실상 완패한 것이고 여기서 더 확전이 벌어진다면 전멸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사실 군부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고

온갖 의혹을 불러 온 장본인으로서 조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군부가 오히려 조사의 주체가 돼 제 입맛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반에는 ‘북한 연루설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미국 정부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 정부와 군부의 ‘북풍’ 조장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하다. 6자회담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 3면으로 이어짐

세상을 논지평

“세계 정상들이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섰다”
이명박, 왕자병 말기?

“작년에 우리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하지 않았다. ... 그래서 근로자들은 작년에 어려움을 덜 겪었다”

열받을 말만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김동성: “북한이 스텔스 어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국방장관 김영태: “그럴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돌고래를 수중폭파요원으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속초함 교란을 위해 새폐를 납파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있다”

김동성과 김태영의 말장난을 비교는 네티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앞당겨 버리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보여 주는 수밖에 없다”

살기등등한 <조선일보>

“피해를 각오하고라도 결심해야 할 전쟁이 있다.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이 없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 [천안함 사고] 계기로 주저할 게 뭐 있나요. 통일로 가는 겁니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도자답게 갈을 빼들고 나가자! 통일로!”

극우의 김동길

“나는 <개그콘서트>를 좋아한다. 그런데 개콘을 보면서 가장 찜찜한 부분이 ‘일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대사 ... 어떻게 김[인규] 사장이 취임했는데도 계속 이 프로그램에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한성교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법적인 소재로 구성된 작품이 방영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이효리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KBS

“내가 [검사] 장모로 통한다. 내가 책 쓴다고 하면 부들부들 떨 사람 엄청나게 많다”

‘떡검’이 성접대를 받은

롭살롱의 주인

뇌물, 향응, 성접대 ...

검찰에게 “정의”는 없다

MBC <PD수첩>이 지난 25년 동안 검사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사 사장의 폭로를 보도했다. 건설사 사장 정 씨는 “검사들에게 밥사 주고 술 사 주고 섹스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했다.

부산지검장 박기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승철 같은 현직 고위 검사를 비롯해 전직 검찰총장 등 57명에 이르는 전현직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정 씨는 검사들의 체육대회, 등산대회, 회식, 환영식, 송별식 등에 비용을 냈고 매달 두 차례 정기적으로 현금을 줬다. 명절과 휴가 때는 따로 돈을 줬다.

엑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정 씨는 25년 동안 “1백억 원”은 썼다고 주장했다. “지청장에게는 1회 1백만 원, 검사에게는 1회 30만 원”을 줬다.

정 씨는 자신이 접대한 검사 중 “몇 분 정도 빼고[는] 아가씨와 잡자리 안 한 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은 정 씨의 청탁을 “보통 다 들어준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 진짜 1백 퍼센트 봐준다.”

이런 폭로에 해당 검사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스폰서 관행’이 “인지상정”이라는 헛소리



‘떡검’의 실제 낮에는 노동자 탄압, 밤에는 성접대

를 한다. 부산지검장 박기준은 <PD수첩>에 폭로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중인 정 씨를 다시 구속할 것을 신청했다.

<PD수첩>의 폭로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떠드는 검찰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래서 정부 뜻에 따라 <PD수첩>·민주노동당 등 비판 세력을 탄압하

던 검찰에 큰 타격을 줬다.

소수 특권 세력·재벌 등과 이처럼 더러운 수천 가닥 끈으로 연결돼 그들의 권력과 부를 지켜 주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것이 검찰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년 망명 전까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그였고 북한 지배계급의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망명 후에는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 편에 서서 북한 체제를 비난해 왔다. 그 때문에 북한 정권은 그를 증오해 왔다.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은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 충격”이라고 했지만,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은 북한 당국만 저지르게 아니다.

남한 정부가 북과 공작원을 대거 보냈다는 점은 영화 <실미도>로 제작될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심지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에게 판문점에서 총격을 일으켜 선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이명박 정권은 이번에도 ‘북풍’을 적극 활용하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이번 사건 발표 시점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시점과 절묘하게 일치하는 데다, 두 사건 모두 북한의 정찰총국이 기획한 것이라고 흘러는 것도 석연치 않다.

게다가 벌써부터 국정원과 검찰은 남파 간

첩이 접선하려 한 고정간첩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주로 간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내의 좌파나 지방선거 경쟁자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전에도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뿐 아니라 그들과 접촉한 남한의 자생적 좌파들을 모두 엮어서 ‘간첩단’이라고 마녀사냥했다.

이번 ‘간첩 사건’은 지방선거 전후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

진보진영은 ‘간첩’을 빌미로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며 정치적 위기 탈출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노동자 투쟁 예방 위해 좌파 공격하기

천안함 침몰 사고 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3월 30일 경찰은 실천연대 전직 간부 세 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북한 노래 20여 곡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4월 15일에는 보안 경찰이 노원청년회 강병찬 회장을 강제 연행해 갔고, 4월 16일에는 보안수사대 20여 명이 학교 안까지 들어와 김현웅 전남대 전 총학생회장을 납치하듯이 연행해 갔다.

올해 경찰이 보안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 인원을 1천 명 가까이 선발하려 할 때부

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이런 광기 어린 마녀사냥은 예고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고, 종교계가 반대하는 4대강 문제 등이 이명박 정부 앞에 쌓여 있다. MBC 노조가 방송 장악에 맞서 파업중이고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도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런 위기들을 타개하려고 다시 국가보안법을 빼 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북풍’을 일으키며 전쟁 불사 선동을 하는 우파들의 재단에 속죄양을 바치려고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사

람들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 힘을 모아 이런 공격에 분명하게 맞서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런 공격이 사회 분위기를 전체를 얼어붙게 해 온갖 개악들을 별 저항 받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지현

단결과 투쟁의 무기, 노동자의 신문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세요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 <레프트21>은 승리의 열쇠가 연대 투쟁의 확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들이 해고자 명단 발표로 ‘산 자’(해고 제외자)와 ‘죽은 자’(해고 대상자)를 가를 때, <레프트21>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여성의 낙태권을 공격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할 때, <레프트21>은 노동자 단결을 위해 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연대의 정신

그래서 <레프트21>을 읽는 노동자들은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 줍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다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해 저항하자는 <레프트21> 기사를 공감하며 대학생들의 투쟁에 관심을 보인 구속 노동자.

동성애에 반대했으나 <레프트21>을 읽고 편견에서 벗어났다는 현대차 노동자.

<레프트21>은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퍼뜨리는 도구입니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떠넘기려 하는 이때, 모든 진지한 노동자 투사들이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노동자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건설하려 하시나요? 그럼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세요. <레프트21>은 동지들의 진지한 고민에 답하려 합니다.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과 <레프트21>을 함께 보시고 구독도 권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단결과 연대를 건설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단결과 연대의 도구, 투쟁하는 노동자의 신문 <레프트21>은 바로 동지들의 것입니다.



구독·후원 : 02-777-2792

www.left21.com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늘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천안함 침몰

불만 단속하러 애국주의 부추기는 지배자들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4월 19일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이명박은 천안함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당신들이 사랑했던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 내자”고 했다.

물론 평범하고 가난한 민중의 아들, 아버지, 남편이었던 천안함 희생자들의 슬픈 사연은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그러나 추모의 마음을 ‘애국주의’ 선동과 ‘국민 단합’ 분위기 조성에 이용하려는 저들의 시도는 역겹기만 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이명박 정부의 위기 탈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 전에 심각한 위기로 몰리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에도 ‘이대로는 [지방]선거가 어렵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서가 연일 올라온다”고 상황을 전한 바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도 예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 ‘국민 단합’과 ‘애국’을 호소하며 우파 결집과 정치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파들은 ‘북한 연루설’을 부정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광적인 선동까지 한다. 이 틈을 타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도 부쩍 늘어났고 ‘간첩’ 사건까지 불거졌다.

보수 언론들은 “천안함 희생자 추모 열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급속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판 길을 가고 있다”며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이다. 이런 애국주의 선동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급양호 희생자들은 철저히 찬밥 신세다.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삼성 이천희와 현대 정몽구의 주식 평가액은 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재산을 늘렸다.

정부는 이런 자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에서 노동자·민중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상황에서 ‘국민 단합’과 ‘국가에 충성’을 말하는 것은 소수 기득권 세력과 그들을 변호하는 정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강요일 뿐이다.

천안함 사고에서도 ‘왜 돈 없고 뺨 없는 서민들의 자식만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저런 비극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물음이 나왔다. 이런 정당한 물음과 불만을 ‘애국’과 ‘국민 단합’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천안함 함미는 인양됐지만, 군부와 우파의 ‘복종’물이 속에 진실은 더 컴컴한 바다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강한 군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뿐

천안함 사고뿐 아니라 최근 헬기과 전투기의 실종·추락 등 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우파들은 ‘개혁정부 10년간 누적된 군기 해이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조선일보> 김대중도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 우리 의식을 지배해 온 개념들은 햇볕, 포용, 지원, 민족, 화해, 평화들이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군은 속된 말로 나사가 빠져 버렸다”고 말한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앞서는 게 영 못마땅한 것이다.

이명박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철통같은 안보로 …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군대의 기강과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기와 안보를 강조하던 군부독재 시절에 군대에서 사고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지금보다 세 배 많았다. 이번 천안함 사고도 ‘안보’와 ‘군기가 해이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해의 긴장 고조 속에 전쟁 준비와 연습, 군기를 강

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서해의 긴장은 세 차례 서해교전을 거치면서 계속 높아졌고 이 지역에 배치된 무기도 계속 증강됐다. 두 차례나 서해교전을 벌인 김대중 정부와 해군력 증강에 몰두해 온 노무현 정부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이 NLL에서 다시 도발할 경우 … 지·해·공 전력(戰力)을 총동원해 초기에 제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해의 긴장은 한층 더 높아졌다.

새때

북한은 이에 대응해 올해 1월 서해 상에서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하고 해안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서해상의 작은 충돌이 얼마든지 육해공군이 총동원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은 “북한의 해안포 위협을 고려해 … 백령도를 엄폐물로 하여 섬 가까이로 기동”(김종대)한 듯하

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지적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더욱 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대규모 전쟁 연습까지 벌이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따라서 군비증강과 무리한 전쟁 연습 등이 이번 사고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사고 당시 속초함의 함포 발사는 “앞으로도 ‘새때’를 보고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는가?”(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하는 섬뜩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이번엔 반드시 적의 피를 봐야 한다”(국민행동본부)는 우파들의 전쟁 불사 선동은 아찔하지만 하다. 남북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고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서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전쟁 준비와 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다.

»면에서 이어짐

그러면서 진실은 더욱 바다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군부가 4월 12일 천안함 함미를 몰래 끌어 올려 2시간 동안 비밀 조사한 것을 두고 의혹이 크다.

절단면은 그물망을 씌워 2백73미터 밖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사실상 군이 주도하는 민군합동조사단은 그 명단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은 함미를 인양한 88수중개발에게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며 입 단속을 했다. 이정국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는 “크게 40가지 의혹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그래서 천안함 사고는 진실을 거지말로 덮어 버린 또 하나의 거대한 군 의문사가 되고 있다. 국방장관 김태영은 “영구 미제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공공 숨겨둔 사고 당시 교신일지, 상황일지, 열상감시장비(TOD) 전체 영상, 독수리훈련 계획, 천안함 절단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군사 기밀’은 대중을 짓밟으며 서로 군사적 경쟁을 벌이는 지배계급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평범한 민중에게는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이익이다.

시민사회가 신뢰할 만한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교조 공격은 선거 패배 두려움 때문

김성보 경수총 교사, 전교조 조합원

이명박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감추면서 찢김거리는 눈물 몇 방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에 보수 언론의 ‘복종’ 선동을 수수방관하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듯도 하다.

그 와중에도 노동자 탄압은 그침이 없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계속 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천안함을 대신해 침몰시켜야 하고, 다시는 건져 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교조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전방위적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압박하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을 표적 탄압하던 검찰은 나아가 1백 스물다섯 학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의 위선적인 ‘법치’의 실체를 보여 줬다.

사진 제공 민주노동당

교조 교사 2백83명의 5년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당비 납부 영수증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5일에 서울남부지법이 전

교조 명단의 공개 금지를 판결했는데도 19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은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법원도 ‘교원의 단체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밝히며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교조 마녀사냥을 위해서 막무가내인 것이다.

전교조는 손해배상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데 마녀사냥식 명단공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침몰

교과부도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하다. 지난 14일 교과부는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외하고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만의 1년치 출장과 공개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 준다.

전교조를 가장 가깝게 위협하는 곳은 노동부다.

규약 시정 요구를 수단으로 삼아, 정권의 ‘미친 교육’에 맞서다 해직당한 교사들을 노동조합에서도 퇴출시키라고 요구하며 전교조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있다. 일단 전교조는 ‘명령연기요청’을 해 둔 상태지만, 노동조합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5월 초 ‘전교조 탄압 중단’을 위한 교육선언을 조직하고 있으며, 학부 모 편지 보내기를 통해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5월 16일 ‘MB교육 반대, 전교조 지키기 전국교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박의 각종 정책들이 반발에 부딪히고 지지율이 부진함에 따라 지방선거의 쟁점이 ‘무상급식 대 전교조 죽이기’가 될 것 같다.

투쟁하는 노동조합들과 함께 전교조를 지지하고 지켜 내는 투쟁에 함께하자.

철도노조가 이명박 폭주열차에 제동 걸어야

철도 노동자들이 4월 30일 파업을 예정하자, 어김없이 지배자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철도공사장 허준영은 4월 말 철도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 없는 정치파업”이라며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임무”다. 이명박이 직접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정부에 맞선 투쟁을 회피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공기업 개혁과 효율”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철밥통”이니 “이기주의”니 하는 비난도 쏟아내지만, 부자들의 “철밥통”을 지키려고 노동자·서민의 등골을 빼먹고 4대강 삽질을 고집하는 이명박이야말로 부자들의 “이기주의”를 지키는 사수대다.

저들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기업 부채를 한탄하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다. 2백조 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를 만든 장본인도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막대한 국가채무를 공기업에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속죄양 삼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는 인력감축, 노조 탄압, 공공서비스 후퇴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구조조정 위협에 놓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교통전가에 신음하는 전체 노동자들이,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후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사진: 김재철

4월 30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동자들. “철도의 레이건이 되겠다”는 허준영의 꿈은 요원해지는가?

MB와 허준영을 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파업을 앞둔 일부 철도 노동자들이 고심에 찬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과연 투쟁으로 이명박과 허준영을 꺾을 수 있을까?’

지난해 8일간의 파업 이후 엄청난 탄압을 받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혹독한 탄압과 공격 앞에서 “싸우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강력한 파업이 아니고서는 작심하고 달려드는 정부와 공사 측에 맞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킬 길이 없다.

따라서 지금 진정한 문제는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힘을 과장하지 말고 정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대의 힘을 과대평가하면 우리 쪽의 힘이 약해 보이기 마련이다. 지난해 철도노조 지도부는 탄압에 위축돼 파업의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파업을 끝내는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도 탄압이 매우 거세지만, 노동자

들의 계속된 항의로 허준영은 군색한 처지에 놓였다.

철도노조 청량리역 연합지부 유균 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항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항복을 받아내 공기업 사장들에게 자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더구나 이명박은 천안함, 4대강 등으로 정치 위기에 빠져 있다. 무지막지한 탄압은 이런 위기의 반영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철도를 멈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명박을 궁지로 몰아넣을 확실한 방법이다.

우덕호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철도라는 기간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국가 기간산업의 동력인 철도 노

동자들이 일을 멈춘다면, 서울과 전국을 잇는 인력·물류수송이 마비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지난해 허준영이 “울 스톱 상황”을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 기간산업

특히 광복한 탄압 때문이라도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합법파업도 불법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합법 테두리에 손발이 묶여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싸움을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달려들어야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법이다.

김천의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파업 때 그냥 파업을 끝낸 게 아쉽습니다. 파업을 하다 말면 다음 파업 때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싸울 때 확실히 싸워야 합니다.”

박상규 조합원은 말했다.

“다들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면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담스럽지만 전면 파업이 낫긴 하다는 게 활동적인 조합원들의 마음일 겁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광범한 노동자연대다. 철도파업이 현실이 되고 정부가 총 공세를 퍼부을 때 전체 노동운동은 철도노조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단협 해지와 구조조정의 위협에 놓여 있는 발전, 가스 등의 공기업 노조들이 앞장서야 한다. 싸움에 나서지 않은 채 철도노조 뒤에 숨어 눈치만 살피서는 이명박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와 같은 시기에 파업에 들어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노총 김영훈 지도부도 철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믿고 자신감 있게 투쟁할 수 있도록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MB 아바타’ 김재철을 내쫓기 위한 MBC 파업

‘낙하산’ 이사 황희만의 부사장 승진에 항의해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이 넘었다. MBC 노조는 자신들을 우롱한 ‘좌빨 청소부’ 사장 김재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졌는데도 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조합원의 참가율이 높아 “파업 이상 열기”(MBC 노조 연보 흙 홍보국장)라 할 정도다.

19일부터는 천안함 취재 때문에 빠졌던 조합원 47명도 동참해 파업 수위를 높였다. 그래서 뉴스도 짧아지고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거의 결방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더는 물러날 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파업에 참가한 한 기자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보내야겠다는 공감대가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굳건히 싸우자 김재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TV제작본부 보직 부장 등 MBC 간부급 사원들도 김재철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 PD 협회·카메라감독협회·아나운서협회·기자회·경영인협회 등 직능단체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와 김우룡 고소 등을 요구한다.

장기전

파업 지지 여론이 높다 보니 김재철도 경찰력 투입 요청 같은 강공책을 쉽사리 쓰지 못하고, MBC 인근에 사무실을 열어 업무를 보겠다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큰집’의 뜻에 따라 온 ‘MB 아바타’ 김재철은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재철은 “몽둥이로 맞는 한이 있어도 ...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풍이 지고, 눈이 내려도 마음을 안 바꾼다”고 밝혔다. 김우룡 고소도 거부했다.

오히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와 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김재철을 몰아내고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려면 MBC 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저들이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는 것에 맞서 파업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파업 집회를 여는 것도 해 볼 만하다.

4월 말부터 시작될 민주노총 투쟁과 MBC 파업을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고 서로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이미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MBC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김재철을 조정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가 여러 악재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투쟁을 밀어붙여 방송 장악 기도를 저지할 때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대안은 무엇일까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 시행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을 위해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최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급속과 공공 등 주요 노조의 반발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근심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지도부는 “더한층의 개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악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됐다. 근심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도 “들러리”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실제 참여해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 하고 털어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근심위에서 나오고, 이미 계획한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급속노조 등 곳곳에서 준비중인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편, 전임자 임금 지급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면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에 맞서려고 반드시 사측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장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다. 물론 이것은 조합비를

인상해야 가능하므로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총당하는 방식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기존 방식보다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노조 상근자들을 통제하는 힘을 확대하는 길이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얻은 몇몇 노조의 사무실이 투쟁 시기만 되면 노조 압박 수단이 된 사례도 노조의 재정 독립이 자주성 확보의 중요한 출발점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일부 투사들이 기업주가 전임자 임금을 주던 기존 방식을 투쟁의 성과라고 옹호하는 것을 넘어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쟁의 성과에 대한 통제권을 조합원들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조합원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물론,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를 위한 임금인상을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쟁취하려는 투쟁이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나아가 노조 전임자들이 조합원들의 뜻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서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노조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종남

지방선거, 반MB 민주연합, 좌파

4+4 협상회의가 4월 20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 이견으로 결렬됐다.

그래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심판 이외에는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대연합이 모든 판단의 우선 순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주요 노조들이 주도해 구성한 진보서울 연석회의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범 야권 단일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요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은 아예 “반MB 연대는 기존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함께 새로운 진보대연합으로서 동일한 위상의 전략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진보정치>> 463호, “반MB는 옛 ‘비지[비판적 지지]’인가”

민주대연합이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최 소장은 민주당을 미화하면서까지 “물지마 반MB 연대 올인” 정책을 정당화한다.

최 소장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 연합 노력은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치와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실천적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최 소장의 말과 달리 1980~90년대 자주파의 ‘무비판적 지지’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비판 없는 지지

물론 1987년과 1992년 대선에서는, 아직 노동운동이 독립적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냉전 우파 정부의 집권을 막으려고 자유주의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었다.

진정한 문제는 자주파가 자유주의 야당을 향해 ‘비판 없는 지지’를 보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자유주의적 자본가 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그들을 미화하거나 전략적 동맹으로 추켜 세우선 안 된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동맹은 악마 자신, 악마의 할머니 ... 와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우리의 손발이 묶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비유를 빌어 표현하면, 최 소장의 주장은 ‘대중에게 악마를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손발



사진: 노영미 (노영미는 노영미의 사진)

진보 양당이 아쉽게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선거연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동계급의 진보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과제는 여전히 필요하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한 한명숙

을 묶을 것이다.’ 미화가 성공할수록, 그래서 연합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악마가 본색을 드러낼 때 대처할 능력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려 자본가 당들과 연합 정부를 꾸린 서유럽 공산당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마비시켜 결국 파시즘에 권력을 내준 경험을 곱씹어야 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물지마 반MB 연대”를 비판하면서 5+4 협상회의에서 빠진 뒤, 진보적 “반MB 대안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진보신당의 행보는 전혀 일관되지가 않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민주노동당 집회에서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진할 테니 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진보신당 대표단은 ‘진보정당 통합 의지를 밝혀 달라’는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진보 선거연합’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주로 유시민과 김진표를 겨냥해 “이기는 단일화”를 하자고 한다.

사실 진보신당 지도부는 처음에 민주대연합을 위한 5+4 회의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직후였다.

진보의 단결

진보 양당이 모두 야권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자, 진보대연합 논의도 힘을 잃었다. 3월 10일 강기갑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만나 “진보대통합 원칙”에 합의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진보 선거연합 논의가 부진하다 보니, 대중의 반MB 열망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거 심판론으로 많이 기울었다. 진보정당 지지층 안에서도 반MB 범야권 단일화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70~80퍼센트를 넘는다(새세상연구소 4월 12일 발표, R&R 의뢰).

물론 이명박 정부가 어렵게 정취해 온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싶어하는 심정에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진보적 정치 대안

을 건설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다. 이 과제 수행에서 진보연합은 필수다. 그런 점에서 두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분열한 것은 유감이다.

진보 선거연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부르주아 야당이 아닌 진보적 정치대안 건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에 투표할 필요가 있다.

진보 후보가 없는 곳에선 민주당의 개혁적 후보를 향한 ‘비판적 투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상 차이는 별로 없지만, 민주당이 이긴다면 적어도 광범한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 승리 후 민주당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재정적자 만회 정책을 펴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의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럴 때 우리의 현 투표 전술은 그 논쟁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소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후보, “MB 경쟁교육의 벽 함께 허물자”

4월 14일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 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의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곽노현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먼저 다함께는 비록 경선에서 최홍이 후보를 지지했지만 곽노현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전한 최홍이 후보, 이부영 후보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예비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관계없이 최종 진보교육감 후보로 당선한 곽노현 후보가 본선에서 꼭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점에서 박명기 · 이삼열 후보가 추대위의 단일화 규칙과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을 했다가 승산이 없어 보이자 경선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흠집을 내며 이탈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이삼열 교수는 세 차례 열린 후보자 토론회 등을 포함해 투표 전날까지 경선에 임했고 “다른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나가서 찬조 연설도 하고 연대해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해 놓고는

투표 당일에도 돌연 사퇴했다. 차후에 다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도, 명분도 없다.

전교조 방어

곽노현 후보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삼성 에버랜드 불법 상속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삼성 운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이 포함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하는 데에 주도적 구실을 했다.

4월 14일 선출 직후 곽노현 후보는 대물림 특권 교육,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한 줄 세우기 무한경쟁,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사교육비, 썩은내가 진

동하는 교육계의 부패와 비리가 우리가 싸울 상대라며 MB 경쟁교육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려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전교조 공격에 맞서 전교조를 확실하게 방어해야 한다.

이미 우파들은 “우리 아이를 전교조 교육감에 맡길 수 없다”며 반(反)전교조 교육연대를 만들어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공격 앞에서 “반(反)전교조 구도는 가짜 프레임”(곽노현 후보)이라며 회피하는 것은 지지자들 결속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김인숙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5호(2010년 봄)

www.marx21.or.kr

정기구독 문의
02-2268-7608

특집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이면 _ 강동훈

이명박 집권 3년차 - 평가와 전망 _ 전지운

금융화 테세와 장하준의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 비판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의 문제들 _ 정성진

유럽중심주의와 민족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와 동아시아 역사 _ 오연 밀러

현대 진보사상 조류

(더 레프트 1848~2000) 비평 _ 콜린 바커

정점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정책 _ 정진희

교편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 _ 정호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정의 정치경제학 _ 김어진

크리스 하먼을 기리며

한 투사의 생애 _ 이연 버철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 5월 3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구속 시도에 당당히 맞서다

지난해 말, 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도중에 강제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된 ‘야간옥외집회 금지법’으로 연행한 것이었기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불법연행이었습니다.

검찰은 면회 온 어머니와 형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제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저를 조사해야겠다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4월 5일 다시 강제로 연행해 유치장에 감금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각된 사안으로 또다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저는 무려 78시간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 모두 묵비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고 운동에 참가한 이들과

제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연행과 조사 과정을 통해 이를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해산할 때 종종 법적 근거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식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되레 경찰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죄인 취급해 사기를 꺾고 운동의 정보를 캐내려는 강제 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용석 명지대학교 학생

철도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느낀 점

4월 15일 서울역에서 단협 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노조의 홍보전이 있었다. 나는 다함께 회원들과 함께 이 홍보전에 참가했다.

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는 쪽에 남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대화를 걸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말을 건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일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우리는 모여 앉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대화를 걸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 주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에 관한 것들이었다.

대화를 하던 노동자는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털어냈다. 그러면서 요새 대학생들은 자신도 언젠가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생들은 노동자 투쟁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가만히 대화를 듣고만 있던 나는 대학생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대학생이 바로 여기 와 있다고 말하고 싶어졌다. 지난해 철도 노동자들 파업 때 아버지가 철도 노동자라고 밝힌 한 학생이 우리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을 지지해 달라는 글을 올리자 많은 지지 댓글이 달린 바 있다. 이런 사례도 전하고 싶었다.

부담감 때문에 머뭇거리던 나는 영 기회를 놓쳐 버릴까 싶어 결국 말을 꺼냈다.

물론 내 말 몇 마디에 당장 그분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생각이 바뀔 것은 아니었다.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자신의 투쟁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뜻 깊은 경험이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에 부담감을 떨쳐 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대를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것이 좋은 출발점일 것 같다. 경험이 있는 동지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

임준형 성균관대학교 학생

‘강남촛불’이 공무원노조를 대놓고 지지하다

지난주 강남역에서 ‘강남촛불’ 모임이 정권의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나도 공무원노조 활동가와 이 활동에 합류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줬다.

‘강남촛불’에서 제작한 유래통쾌한 공무원노조 지지 팸플릿과 이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지지 댓글들을 내가 근무하는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며칠만에 조회수가 1천7백 회를 넘

을 정도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고 조합원들의 꼬리말도 여러 개 달렸다.

“아름다운 연대의 빛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영혼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설립과 민주노총 가입을 할 수 있는 영혼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 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촛불’ 회원들은 법원본부 지지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일에선 공무원노조와 ‘강남촛불’이 보여 준 모범적인 연대와 저항의 정신은 탄압을 뚫을 것이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이 오듯이 말이다.

양윤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철도·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식 신문 판매 후기

신문을 판매하며 노동자들과 토론하기

4월 17일, 파업을 준비중인 철도·화물연대 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나는 청소년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면 항상 <레프트21>을 들고 대열로 향한다.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나는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신문을 판매하며 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노동자는 “파업을 해야 한다. 지도부가 GO하면 많이 동참할 것이다. 비조합원들도 같이 싸우려고 한다. 격정도 있다. 물류량이 줄고 기름값은 오르고 정말 막막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

음 반, 이런 상황에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반이다”하고 말했다.

이 노동자는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의 힘이 훨씬 세질 것”이라고 하면서 “파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파업을 지지해 줘서 고맙다는 말도 전했다.

한 철도 노동자는 “우리는 길이 없다. 파업만이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에서 온 화물연대의 한 동지는 “금호타이어 투쟁 때 <레프트21>을 만났다”고 했다. “발로 뛰는 게 참 마음에 든다”며 신문을 구입하고 “우리 꼭 파업할거니까 그때도 꼭 오라”고 했다.

이슬기

내가 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

나는 전국의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모인 2010년 투쟁 선포식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면서 많은 노동자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철도노조 전기지부의 한 노동자는 “지금 허준영의 탄압으로 조합원들이 위축돼 있지만 그래도 현장 동력이 80퍼센트 된다. 자신감 있게 싸울 것이다”라며 결의를 보여 줬다.

평택에서 올라온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들에게 현장 불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표준요금제 약

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 엄청난 분노가 있는 것을 알았다”며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말해 줬다.

그리고 한 화물 노동자는 “앞으로 민주노총이 정말로 연대파업을 조직해 주면 좋겠다”며 연대파업에 목말라 했다.

한 철도 차량지부 노동자는 “앞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확실히 끝까지 싸워야 한다. 자꾸 파업을 하다 말면 현장 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같이 파업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환

감옥에서 온 편지

‘21세기 좌파의 길을 만드는 <레프트21>을 응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예상했던 바지만, 미친 현실을 맞닥뜨리는 심정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미친 세상 앞에서 돌파구를 쉬 찾지 못하는 운동 진영의 모습을 마주하는 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좌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동지들의 발걸음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 그 지향이 늘 한결같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전교도소에서 윤창호

박종태 열사 투쟁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병원 장사에 날개 달아 주려는 정부

변해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1만 3천여 명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 지원 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복지부는 발뺌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인 간의 의료 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4백46만 명을 대상으로 화상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산한 의료취약 주민 4백46만 명은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우선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강화가 필요하다. 원격진료 운운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격진료 허용의 진정한 속셈은 의료+IT 융합체인 한국u헬스협회를 위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u헬스협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말을 한 바 있다.

이 협회 회장은 성장철 서울대병원장이고, 대형병원들과 바이오스페이스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U-헬스를 통한 의료상업화로 황금알을 기대하는 기업들이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안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을 더 몰아 주고, 전자업체들에게 의료로 팔아먹느라 국내 의료전달

체계를 망가뜨리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6월에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전자 의료기기를 IT에 접목하는 의료산업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식코

둘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MSO)을 추가로 허용하는 문제다. 지금도 병원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임금체계·후생관리 및 경영진단·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인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기기 구매와 재무, 임금체계 관리는 병원의 모든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다른 병원의 경영지원 컨설팅으로 이익금을 남길 수 있고, 이것으로

병원에 자본투자와 유치를 가능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병원은 영리병원의 허용 없이도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병원의 직원교육과 임금체계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일명 ‘노무관리 전문업체’들이 삼성병원과 같은 무노조기업을 전체 병원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문제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M&A)를 허용하면, 덩치가 큰 자본들은 의료법인들을 합병해 자기 병원으로 흡수우기를 할 수 있다.

결국 대형 재벌 병원이 체인 병원을 늘릴 수 있어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고,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소의 지역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법인 이유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일정 정도 안정된 수익창출이 보장되면 민간보험회사나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되고, 병원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자본의 체인점이 된 병원들은 민간보험사와 제약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구매, 재무, 임금체계 등의 경영 컨설팅과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영화 <식코>가 보여 준 미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는 의료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전면적인 영리병원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에 몰인하겠다는 정부의 신호탄이다.

다시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을 건설해야 할 때다.

G20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트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박찬 강동을 토로했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이 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부라부라 새로 소집한 회의다. 2008년 11월 워싱턴, 2009년 4월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회의가 열렸고 올해는 캐나다(6월)와 서울(11월)에서 회의가 열린다.

G20은 그 구성부터 철저히 강대국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G20의 구성을 놓고도 강대국의 이해가 엇갈렸다. 일본은 G8의 종속을 원했다. 반면, 유럽은 브라질·인도·중국·남아공·멕시코가 참여하는 G13을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한국·사우디아라비아·호주·터키·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으로 자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나라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했다. 그 결과물이 G20이다.

이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계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왔는지 또 그런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다.

2007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금융기업들이 져야 한다. 이들은 미국의 주택대출을 담보로 실제 집값의 수십 배가 넘는 액수로 파생금융상품을 팔았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였다.

문제의 당사자들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투기로 이 금융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자 각국 정부들에게 손을 벌려 구제금융을 요구했다. 이들을 망하게 두면지 아니면 국유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G20의 어느 정부도 금융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이들 은행과 금융기업들의 손실을 매꾸 주었다. 미국은 7천억 달러, 유럽은 2조 3천억 달러, 한국만 해도 40조 원이 넘는 돈을 금융기업과 대기업에게 쏟아부었고 결국 이 돈은 마지막 한 톨까지 국민들이 갚아야만 한다.

돈은 부자들과 대기업이 벌었는데 그 손실은 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 바로 G20이다.

아이티에 대한 전 세계의 구호액수는 20억 달러였지만 골드만삭스 한 회사에 대준 구제금융은 1백억 달러였고 이 회사 임원들의 연봉 보너스만 48억 달러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타리츠가 ‘이건 뭐 부자

들을 위한 사회주의 아니냐고 툭탄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의 더 근본적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가 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이러한 노동자 쪼여짜기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자본의 수익성이다.

1970년대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G8 정부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복지제정을 깎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 신자유주의는 IMF·세계은행·WTO를 삼두마차로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집행돼 왔다. 그런데 G20이 내린 결론은 이 3대 괴물을 더욱 강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전 세계의 빈곤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지금 세계 인구의 2퍼센트가 전 세계 부의 40퍼센트를 독점하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하위 50퍼센트는 부의 1퍼센트만을 가지고 있다.

당장 IMF가 한국 민중에게 어떠한 기구였던가? 1997년 경제 위기 때 한국에 긴급재정을 강요하고,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도록 강요한 것이 바로 이 IMF였다.

이것도 모자라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남아 있는 물·가스·전기가 민영화하고, 건강보험도 민영화하며, 대학등록금은 올리고, 연금을 삭감하자고 하며, 광우병 위험이 있든 없든 무조건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WTO 체제다.

그런데 G20 회의에서 하는 일이 바로 IMF와 WTO와 자유무역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래도 중국이나 브라질·인도·남아공 등이 있으니 G8보다는 나았진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른바 BRICS 신흥공업국들이 G20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도 개발지원금의 증액도 아니며 기후변화를 막는 실질적 정책 수행도 아니다. 이들은 IMF와 세계은행을 강화하되 여기에서 자신의 자본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돌아가면서 보는 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장국은 순반상 한국이 2010년 의장국을 맡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두고 한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서고 “국력이 상승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주장은 과장을 넘어 거짓말이다.

여기에 G20이 지금까지 해 온 논의와 실행한 내용은 위기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빈곤과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하물며 이런 G20 정상회의가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G8이나 G20은 현 경제 위기와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들이 아니라 이 위기를 만드고 심화시킨 당사자들이다.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자본주의는 일탈자”



①②④⑤ 작년 4월 영국 G20 회의의 행동 4만명이 참가해 ‘고장난 자본주의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고요’ 요구했다.

③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20 회의의 운동 참가 호스 포스터

영국, 캐나다를 이어 올해 11월 서울에서 자원을 건설하자.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외”를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에서 분명이 보여 왔듯이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뚫린다.

부자 감세와 4대강으로 악화된 재정 상태를 “건전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세금

부담 가중과 복지 축소를 뜻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공공요금 인상,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후퇴를 뜻한다. 2010년 2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의료 보험 축소와 민간 의료 확대, 각종 연금 축소 등 공공부문 재정을 줄일 각종 노후우들이 일거였다.

●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담에서 ‘보 호주의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양자간 FTA를 아심차게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추진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사회공공서비스를

화를 촉진시키는 반민주적 협정이다.

● 때때로 G20에서 논의되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내용들은 말만 무성하다.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회의에서 개최된 노동자회의는 위약계약을 위반한 사회안전 강화를 고용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각국에서 전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도 2010년 4월 G20 노동자회의에서 권고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26퍼센트밖에 안 돼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

로 낮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6퍼센트 OECD 국가 중 최고다.

임시직 노동자 비율도 스페인 다음으로 높다.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6.9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는 OECD 평균 20.7퍼센트에 전혀 턱없이 낮은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과 산재 사망자 수는 부동의 1위다.

ILO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G20을 이명박의 반노동 정

책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복지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담이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G20을 그들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강철구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제 파헤치기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서터바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거나 미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하거나.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안화가 절상됐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산 수입제품의 가격만 높여 미국의 소비 수요를 억제할 거라는 견해와 미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하면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서 얽치락뒤치락할 것이 분명하다.

IMF는 2월 인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예고편을 발표했다.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민간보험지출을 활성화라는 주문도 있다.

‘자유화’

둘째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의제다. IMF 내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표성은 과대대표돼 있다. 미국은 중대 사안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IMF 내에서 개도국의 자본율이 높아지고 IMF 총재와 부총재가 개도국 출신이 된다고 해서 “IMF가 미국 재무부 지부”라는 성격이 근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노엄 촘스키는 “IMF는 지금도 미국의 재무부 지부에 불과하다. IMF가 개교전선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에게 IMF 구제금융 조건을 강요한 미셸 칼드워치 IMF 총재와 금융기업의 시발점이 된 대항투자는행과 파생상품을 조장한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자 전 미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이 IMF 개혁을 사실상 관장하는 ‘IMF 운영개혁위원회’의 주요 인물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IMF의 악영향들은 구제금융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IMF는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아이슬란드·그루지아·헝가리·라트비아·파키스탄·세르비아·벨라루스에 한걸같이 고금리와 임금동결,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를 이어졌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G20에서 합의된 경기부양액의 대부분이 IMF 자본확충에 쓰이는데 최근 몇 달 동안 IMF가 10여 개국에 체결한 자금 지원은 경기부양이나 성장촉진보다는 경기회복에 나쁜 것들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명박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빈곤국 지원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G20에 내놓는 빈곤국 지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 G20 지도자들은 “자유화” 해결책이 빈곤

아프리카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자유화’가 아니다. 아프리카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 곳곳에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과 예방접종 주사 그리고 식량 무상 지원이다.

IMF는 미국 재무부 지부

현재 원조는 빈곤국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기보다 선진국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 원조를 주는 나라의 상품만을 사용하고 차관도 포함되는 공공개발원조(ODA)의 구조 때문에 “실제로 원조국들은 원조의 평균 7퍼센트만을 민간발전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유엔개발계획보고서〉)

그러나 원조는 계속 줄고 있고 한국의 ODA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내에서 꼴찌다.

넷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도 서울 정상회의 때 다뤄질 의제다. 이명박은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운운한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 다뤘다고 하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 합의에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없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뒀다 한다”고 못 박았다.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피조환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G20은 경기부양 예산의 80.5퍼센트를 녹색 부문에 배정했다며 한국을 녹색국가로 칭송했다. 우리는 여기에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서울 정상회의 의제들은 무능한 자본주의적 대안이다.

김어진

G20 항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이명박은 집권 후반기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G20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G20 항의 운동은 G20 정상회의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장식하기를 원하는 이명박의 신경을 매우 거슬리게 할 투쟁이다.

이미 민주노총의 제안에 따라 4월 중순에 시민사회민중단체 준비회의가 열렸고 조만간 공동기구가 꾸러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11월 11일에 대중 시위를 하라고 제안해 놓고 있다.

또, 11월 6~13일을 항의 주간으로 삼겠다고 결정했다.

G20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온 기구였던 만큼, 이에 저항하는 시위를 최대한 크게 건설하자.

김어진

“기후변화 투쟁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월 19~22일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가 열렸다(관련기사 16면). 2만여 명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레프트21) 장호중 기자가 이 회의에 참여한 영국 기후변화 반대운동의 주도적 활동가 조너선 놀라 인터뷰했다.

다른 기후 정상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는 NGO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과는 다른 코차밤바 회의의 의미는 어떤 것인건가요?

이번 회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자본주의 열강들은 기후변화화를 막는 데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인도, 중국이 주도해 모든 나라 정부가 받아들인 코펜하겐 정상회의의 결론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고 민중과 운동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볼리비아 정부가 이모임을 소집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은 수년간 후퇴했을 것입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잘 알려진 정부인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영국의 ‘기후변화반대운동’이 이런 회의를 소집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겠죠.

많은 사람이 참가한 것은 중요합니다. 1만 5천 명이 사전 등록했고 오늘과 내일 5천~7천 명의 볼리비아인들이 등록할 것입니다. 거의 코펜하겐에 맞먹는 수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고 싶은 운동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점은 운동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NGO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코펜하겐에서 욕스름,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구안보와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없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뒀다 한다”고 못 박았다.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피조환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G20은 경기부양 예산의 80.5퍼센트를 녹색 부문에 배정했다며 한국을 녹색국가로 칭송했다. 우리는 여기에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서울 정상회의 의제들은 무능한 자본주의적 대안이다.

김어진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IMF의 악영향들은 구제금융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IMF는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아이슬란드·그루지아·헝가리·라트비아·파키스탄·세르비아·벨라루스에 한걸같이 고금리와 임금동결,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를 이어졌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G20에서 합의된 경기부양액의 대부분이 IMF 자본확충에 쓰이는데 최근 몇 달 동안 IMF가 10여 개국에 체결한 자금 지원은 경기부양이나 성장촉진보다는 경기회복에 나쁜 것들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명박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빈곤국 지원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G20에 내놓는 빈곤국 지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 G20 지도자들은 “자유화” 해결책이 빈곤

아프리카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자유화’가 아니다. 아프리카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 곳곳에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과 예방접종 주사 그리고 식량 무상 지원이다.

넷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도 서울 정상회의 때 다뤄질 의제다. 이명박은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운운한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 다뤘다고 하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 합의에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없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뒀다 한다”고 못 박았다.



시위대

일본 전진한 기후변화 투쟁

이곳에서 세계사회포럼, 무토지농업노동자(MST) 운동, 브라질 노동자당(PT), 에코드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운동, 그리고 에코페스트와 자메리카의 자메리카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이 회의를 주최한 것은 이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좌파적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 입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없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뒀다 한다”고 못 박았다.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피조환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G20은 경기부양 예산의 80.5퍼센트를 녹색 부문에 배정했다며 한국을 녹색국가로 칭송했다. 우리는 여기에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서울 정상회의 의제들은 무능한 자본주의적 대안이다.

김어진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IMF의 악영향들은 구제금융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IMF는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아이슬란드·그루지아·헝가리·라트비아·파키스탄·세르비아·벨라루스에 한걸같이 고금리와 임금동결,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를 이어졌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G20에서 합의된 경기부양액의 대부분이 IMF 자본확충에 쓰이는데 최근 몇 달 동안 IMF가 10여 개국에 체결한 자금 지원은 경기부양이나 성장촉진보다는 경기회복에 나쁜 것들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명박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빈곤국 지원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G20에 내놓는 빈곤국 지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 G20 지도자들은 “자유화” 해결책이 빈곤

아프리카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자유화’가 아니다. 아프리카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을 곳곳에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과 예방접종 주사 그리고 식량 무상 지원이다.

넷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도 서울 정상회의 때 다뤄질 의제다. 이명박은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운운한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 다뤘다고 하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 합의에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없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뒀다 한다”고 못 박았다.

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사회포럼과 유럽사회포럼은 한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인 다음부터 우리는 단결해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분열한 운동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변화 운동의 다음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코차밤바 회의 조직을 시작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국민투표와 기후변화 재판소 설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국민투표가 실시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린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제가 옳을 겁니다. 기후변화 재판소를 설치해도 별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코차밤바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지역에서 회의를 열고 이곳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 기후 협상을 둘러싼 투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큰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내년 남아공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남아공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사회운동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 남아공 행동을 준비해야 하며 각 나라의 연대 운동들도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일자리를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때, 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후 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운동에 진지하게 참가했지만 소수입니다. 파라스 지금부터 기후변화 투쟁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바마는 주요 자본주의 열강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비용을 지불할 의무에 굴복하거나 양단 간 결단이나 했습니다.

이들 조직의 지도자들은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민주적인 조직은 지구의 벗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파스와 욕스름은 비민주적 조직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몇 명의 참관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NGO와 많은 주류 환경주의자는 크게 사기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좌파와 억압받는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라틴아메리카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라틴아메리카입니다.

이명박은 집권 후반기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G20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G20 항의 운동은 G20 정상회의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장식하기를 원하는 이명박의 신경을 매우 거슬리게 할 투쟁이다.

이미 민주노총의 제안에 따라 4월 중순에 시민사회민중단체 준비회의가 열렸고 조만간 공동기구가 꾸러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11월 11일에 대중 시위를 하라고 제안해 놓고 있다.

또, 11월 6~13일을 항의 주간으로 삼겠다고 결정했다.

G20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온 기구였던 만큼, 이에 저항하는 시위를 최대한 크게 건설하자.

김어진

기후변화 반대 운동의 디딤돌을 놓고 있는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참가자들

시위대

이주노조 활동가 미셸이 말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사진: 정미영 기자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조의 주도적 활동가인 미셸 씨를 만났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전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지금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모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반원한테서 도망치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오인받은 한국 노동자들이 봉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연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을 포함해 인신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장이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외국인과 한국 사회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경찰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단속을 보십시오. 그것이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우리에게 관한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고 한국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슬럼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당한 것 같은 일을 오늘날 이주노동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탄압을 보면,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독재 정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단체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에 관해 더 많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실업률이 10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일자리 대다수는 사무직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3D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일손이 부족합니다.

기계 다섯 대

그러나 일손이 더 필요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중 한 명은 자기 작업장에서 혼자 기계를 다섯 대나 운전합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제 생각에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악화

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합니다. 사장이 한국 노동자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것입니다. 사장은 이주노동자를 학대하고 기계 세 대를 돌리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이라면 그런 조건에 저항할 것입니다. ‘나는 기계 한 대만 운전할 수 있고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없어. 내 임금을 올려 줘’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학대당해도 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한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전반적 생활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평등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두 노동자 집단을 경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한국 노동자들의 지지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용욱



사진: 정미영 기자

“글로벌 코리아”? 세계를 망치는 G20 정상들을 초대하고 고마운 친구 이주노동자는 내쫓는 이명박의 위선

이주자 속죄양 삼기의 위선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이주노동자 신규 입국 쿼터를 대폭 줄였다. 쿼터 축소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확충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만 분명히 보였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예산은 3조 원이 넘게 줄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각종 규제 완화, 감세 정책 등으로 기업들을 지원했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신규 고용은 전혀 늘리지 않았다.

한편, 실업률이 매우 높음에도, 중소기업들은 이주노동자들보다 1.5~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느라 매일 잔업과 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한 전자 부품

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휴일이 없이 일했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돕다 침몰한 금양호 선원이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도 1년 8개월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80만 원을 받고 평균 하루 12시간 이상, 바쁠 때는 밤을 새우며 일하다 차디찬 바다에서 죽었다.

이렇게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훔쳐간다는 주장을 퍼뜨린다. 이것이 ‘바다를 향한 경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무슬림 이주자 마녀 사냥

이주 규제 강화의 다른 측면은 이주자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혐의를 뒤집어씌워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의 세계적인 최근 ‘트렌드’는 무슬림을 표적 삼는 것이다.

최근 두 달 사이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사원 성직자와 이주노동자들이

연속해 ‘탈레반’ 소속 테러리스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이들에게 씌운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며 언론의 마녀사냥을 부채질했던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미국 CIA에서 수배한 탈레반 중간 간부’, ‘G20을 앞두고 지하드 선동’ 등의 보도로 공포를 조장했다.

무슬림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기 위한 계산된 공격이었던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이런 식의 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수난도 여전하다. 4월 2일 네덜란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신분인데도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고 오갈 데 없는 처지를 비판해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4월 7일 경북 군위에서는 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단속반의 추격을 피하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머리가 깨지고 이와 양 손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며칠 전에는 이주노조에 필리핀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부의 안타까운 상담이 들어왔는데,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많은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유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는데, 이 여성이 연이어 사산한 것은 이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삶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비인간적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의 경축일인 메이데이조차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 2일에도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주노동들과 함께 메이데이의 연대의 전통을 이어가자.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용불량자) 시대’라 부를 만하다.

도대체 왜 취업이 안 될까? 이명박의 말대로 ‘자활 노력’이 부족해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고 ‘안정성 중심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고용안전망이 엉망인 한국에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곧 평생을 저임금과 실업, 재취업을 반복하라는 뜻과 같다. 게다가 이미 많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알바를 하거나 ‘88만 원’ 월급을 감수하고 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가 부족해서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조사한 것을 보면 상장사 5백48곳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채용에 나선 기업은 1백94곳으로 전체의 35퍼센트에 그쳤다.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 때 이윤을 지키고자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린다. 심지어 수조 원대 수익을 남긴 기업들조차 그렇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2조 원 가까이 올린 KT는 연말에 6천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개인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자활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 만무하다.

눈높이

그런데 ‘3백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이명박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고작 단기·저질 일자리인 청년인턴제다. 인턴자의 70퍼센트가 커피 심부름, 복사 등 단순 작업을 했다. 무엇보다 몇 달 뒤에는 또다시 ‘백수’로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삼일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올해 일자리 예산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줄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도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맞서 최근 학생·청년·시민단체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삼아 운동을 벌이고 있다. 4월 7일에는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대학생다함께, 청년유니온 등 각계 단체들을 포괄하는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가 발족했다.

이들은 사회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의 무제 도입, 청년고용예산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민중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서비스(교육, 보육, 복지, 환경, 노인요양 등)에 투자하면 일자리 1백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 재원은 4년간 부자 감세액의 일부, 4대강 삼일로 쏟아부을 돈 일부만 돌려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정부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려면 정부를 강제할 대중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자들은 파편화돼 있고, 투쟁에 나서더라도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기 어렵다. 때문에 청년 실업 운동은 조직 노동자들의 운동과 만나야 한다.

실업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에서 4월 총력투쟁과 6·2 지방선거 정책의 주요 요구안으로 청년 실업수당 지급,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08년 말 그리스에서 높은 실업률과 양극화 심화로 청년들이 투쟁을 벌였고, 이것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예산안·민영화·임금삭감에 반대하는 그리스 양대 노총의 파업과 맞물리면서 큰 힘을 발휘해 정부의 양보를 받아낸 바 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한다.

성지현

» 관련기사 11면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큰 곤경에 처해 있다.

우파들은 경제·정치 위기 속에서 앞으로 낙태 공격을 강화하며 우파의 집집점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낙태권 공격에 반대하는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자의 참가가 매우 중요하다. 낙태는 계급 문제다. 부자 여성들과 노동계급 여성들은 낙태 문제에서도 평등하지 않다.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던 시절에 낙태로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자궁 손상을 입은 여성들 중에 부자 여성은 없었다.

지금도 한국의 부자 여성들은 얼마든지 비싼 돈을 들여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치솟은 낙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낙태로 여성들이 공격받고 보수적 분위기가 강화되면 노동계급 운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장기전

지난 두 달여 동안 여성·진보단체들은 낙태 공격에 대응해 왔다.

3월 5일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근 낙태 시술 병원 관계자 구속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여성운동진영은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한 것도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참가한 여성단체



3월 5일 낙태단속 반대 행동 우파의 낙태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면 운동 건설을 위한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내에는 낙태 공격에 반대하면서도 ‘프로라이프 의사회 vs 여성단체’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대응하면 오히려 키워 줄 뿐’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래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반낙태 집회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에는 네트워크 내 일부 단체들만 참가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결성된 동기 자체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도 원했던 원치 않았던 실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해 왔던 것 아닌가.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일각의 주장처럼 ‘금방 치고 빠질 단체’가 아니다. 우파의 낙태권 공격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 운동이 거둔 성과물을 도로 회수해 가려는 반동적 시도들(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권 찬반 문제는 장기전이 될 공간이 크다. 여성운동은 낙태 반대론자들의 위협성을 과소평가하

지 말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낙태단속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들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낙태사례수집은 낙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계획한 인권위원회 진정도 낙태단속 반대 운동의 새로운 초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행동

이와 더불어 대중 행동을 조직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도 고소·고발뿐 아니라, (아직은 육내이긴 하지만) 집회까지 열며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가 때문에 우리 측도 이에 대항하는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또, 대규모 행동은 커다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낙태권 옹호 운동이 대중 행동으로 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낙태 단속 반대 행동을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선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선전 활동은 대중 행동을 조직한다는 전망 속에 배치돼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NGO 활동가들은 대체로 대중 행동 건설에 소극적이다. 여기에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위협성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에서 곧 낙태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듯하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얼마 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낙태 허용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되, 임신 12주 이내일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낙태 수술 전에 상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보다는 허용사유를 늘리는 안이지만, 낙태단속 반대 운동이 지지할 수는 없는 안이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고, 허용 범위 밖의 낙태는 여전히 금지하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우파들이 낙태 반대 캠페인을 맹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안마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로부터 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영국에서 좌파와 페미니스트들은 함께 낙태권 옹호 운동을 건설했고, 그 결과 두 차례나 우파들의 낙태권 공격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1979년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이 조직한 8만 시위는 낙태허용기간을 축소하려는 우파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좌절시켰다.

반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대중 운동과 거리를 두고 민주당에 의존하면서 낙태권 운동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클린턴 집권기에 낙태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협력적 태도

한편, 최근 네트워크 회의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가부장제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와 함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은 운동을 확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태도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네트워크가 “느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이론 통일까지 요구하는 것은 느슨함과 거리가 멀다.

또, 특정 이론을 지지해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몇몇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네트워크 회의에서 ‘그동안 여성운동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좌파들이 왜 낙태 문제에는 적극적이나’며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는데, 이것도 단결에 이롭지 않은 태도다.

좌파가 모두 여성운동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부당하지만, 설령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단체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과거’를 문제 삼는 방식은 현명하지 못하다.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운동 덕분에 여성차별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고, 호주제 폐지 등 주요한 법·제도적 개선은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운동이 여성 NGO들의 전유물이라는 식의 태도를 바꿔 새롭게 운동에 참가하는 단체들과 흔쾌히 협력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다.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1930년대 미국 실업자 운동의 교훈

1930년대 대공황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실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서, 미국 공산주의자들은 실업자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했다.

1930년 3월 6일 대중적 실업자 운동이 벌어졌다. 25개 도시에서 50만 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등골을 뽀아 대공황을 벗어나려던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전략에 일격을 가했다.

이 시위는 실업자평의회가 조직했다. 실업자평의회는 공산당이 1929년에 결성한 실업자 단체였다.

1920년대 말에 공산당은 대규모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스탈린주의의 ‘제3기’ 전망을 따랐다. 이 전망에 따라 공산당은 개혁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맺기를 거부했고, 미국노동총연맹(AFL)을 느닷없이 “사회 파시스트” 조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혁명적” 노조 연맹인 노동조합통합연맹(TUUL)을 창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통합연맹 결성은 지난 10년 동안 공산주의자 수천 명이 힘겹게 이룬 영향력과 명성을 파괴했다.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 삭감에 맞서 노동

운동의 단결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기 전망’은 역설적 효과를 냈다. 코민테른(스탈린이 주도한 국제공산당 조직)은 대규모 경제 붕괴에 대비해 각국 공산당들이 실업자 단체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공산당은 주식시장 붕괴 두 달 전인 1929년 8월에 실업자평의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해 실업자 운동에 기여했다.

첫째, 급진적 요구를 성취하려면 노동자 운동과 실업자 운동이 연대해야 한다. 공산당은 디트로이트에서 이런 연대를 훌륭하게 건설했다. 디트로이트의 실업자들은 거의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었다. 디트로이트 실업자평의회와 청년공산주의자동맹은 자동차 공장들로 향하는 행진을 주도했다. 그들은 공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자들이 파업 파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1932년 3월 7일 실업자평의회와 노동조합통합연맹 소속 자동차노동자노조가 이끈 포드 기아 행진은 그 뒤 10년 동안 벌어진 미국 자동차기업의 노

조 결성에서 첫 장을 기록한 사건이었다.

둘째, 인종 차별과 민족 차별은 실업자 운동이 직면한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미숙련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중에는 흑인과 이주자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숙련 노동자들의 편견과 인종차별주의가 흔히 뒤섞였다.

단결의 본보기

공산당은 흑인과 백인 실업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자평의회가 구호 기관, 농장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렇듯 공산당은 인종과 고용의 분열을 넘어 노동운동의 단결이라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 줬다.

그러나 경쟁 조직들을 모두 “파시스트”라고 공격하는 종파주의 정치가 그 명성을 갉아 먹었다. 게다가 공산당은 공공연하게 실업자평의회를 통제하려 들었다. 실업자평의회가 조직한 시위들은 종종 소련 방어를 호소하는 연설들로 채워졌다.

한편, 실업자 운동은 노동자 투쟁의 뇌

관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구실을 했다. 1934년은 미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이었다. 뉴잉글랜드 주와 조지아 주 등에서 섬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톨레



193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를 행진하는 실업자 운동 참가자들

도·미니애폴리스·샌프란시스코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실업자 단체들이 이 파업들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급진적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1935년에 친노동법들(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제2차 뉴딜”이다(1933년에 발표된 “제1차 뉴딜”은 불확실한 약속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1938년 경기 침체 때는 더는 1930년대 초반 같은 분노의 폭발이 없었다. 공산당의 인민전선 전략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인민전선 전략을 채택하며 ‘제3기’ 전망에 따른 광적인 종파주의를 포기했지만, 그와 동시에 혁명적 사회 변화 비전도 포기했다. 공산당은 루스벨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실업자 운동은 급진적 중심을 잃었고, 그 결과 제3차 뉴딜은 없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인민전선 전략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까지 지배자들의 분리주의에 맞서 훌륭하게 투쟁했고, 실업자 운동과 반자본주의 전망을 결합시켰다.

김인식 kis@left21.com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②

교착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 혁명

나는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차베스를 멀찍이서 본 적이 있다. 당시 톨라와 차베스가 하루걸러 포르투알레그레 체육관에서 연설을 했고,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톨라가 일부 참석자들의 야유를 받은 반면 차베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청중도 차베스 연설 때 훨씬 많았다.

톨라는 브라질 민주화 투쟁에서 영웅적 구실을 한 노동자 출신이고 차베스는 군인 출신으로 원래 톨라와 같은 확고한 좌파적 기반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차베스가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일까?

톨라는 2003년 집권하면서 전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했기에 급격하게 지지자들의 환멸을 샀다. 그러나 차베스는 이날 연설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쳤다.

차베스 지지자들 중 일부는 차베스가 집권할 때부터 톨라와 달랐다고 주장한다.

차베스는 1958년부터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양대 정치 세력, 즉 민주행동당(AD)과 기독교당(COPEI)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실망한 대중의 반발 — 그것은 1989년 ‘카라카소’라는 대중항쟁으로 나타났다 — 덕분에 집권했다.

그러나 사실, 차베스는 집권하기 전 자신의 모델이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그래서 초기 차베스의 정책을 보면, 그는 2003년 톨라 정부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조심스러웠다. 차베스는 한편으로 빈민 정책을 확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특권층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 했다.

일부 차베스 지지자들은 1999년 헌법을 차베스의 ‘혁명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한다. 이 헌법이 좀더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의 직접 민주주의를 약속한 구절을 당장 실현하려는 노력은 뒷받침되지 않았을 뿐더러(주민자치위원회는 2006년부터 본격화), 사유재산을 엄격히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쿠데타와 민중 저항

그는 2000년 신헌법 아래 치른 대선에서 1998년보다 표를 4퍼센트 더 얻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사회·경제적 개혁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11월 대통령령으로 49개 법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당시 차베스는 신중함을 보여, 이 법안들 중 상당수는 2004년에 가서야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치는 친차베스와 반차베스로 급격하게 양극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차베스가 통과시킨 법안에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의 수입에서 정부 몫을 늘리고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처는 정부 몫을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리는 정도였는데도, 베네수엘라 지배자들은 철저히 특권층의 이익에 복무해 온 PDVSA의 사소한 변화도 용납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2001년 말부터 거리에서 반정부 우익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그에게는 대중조직 ‘볼리바리안 서클’이 있었지만 선거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 대중 운동 조직으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우익은 차베스의 약점을 봤다고 생각했고 2002년 4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차베스를 몰아냈다. 이때 우익과 심지어는 차베스 측근 인사들도 전혀 예상하지



2006년 초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 관리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에 들어간 셸팩스 의류 공장 노동자들 2년에 가까운 투쟁 끝에 요구 사항을 성취했다. 볼리바리스 혁명의 미래는 이런 움직임의 확산에 달려 있다.

못한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베네수엘라의 평범한 민중 수십만 명이 차베스의 복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었다. 4월 13일 차베스는 대통령 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돌아온 차베스가 처음 한 일은 PDVSA의 사장으로 친우의 인사를 임명하는 등 쿠데타 세력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차베스의 약점을 봤고 그해 말 PDVSA와 주요 기업을 포함하는 전국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 차베스를 내쫓고 대중의 급진화에 쐬기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차베스가 조직하지 않은) 기층의 반격을 받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PDVSA 노동자들이 쿠데타와 사보타주에 동조한 우파 노조 지도부의 명령을 거슬러 직접 시설을 접수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차베스는 이런 기층 투쟁의 압력 속에서 급진화했다. 2003년 4월 우익의 패배가 명백해지자 미시온(교육, 보건, 고용 등을 담당한 사회복지 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급진적 사회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PDVSA 재국유화를 진행했고,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을 이용해서 25개 미시온들을 설립했다.

차베스가 반신자유주의 대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중투쟁이 지배자들을 두 번이나 완패시키고 세력균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차

베스는 대중의 에너지를 흡수해 2004년 말에는 ‘볼리바리스 혁명’, 또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섰다.

21세기 사회주의

한편, 국제적 상황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유리하게 변했다. 일단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자기 뒷마당에 손을 대기 힘들어졌다. 또, 전쟁 여파로 각국이 비축 석유량을 늘리고 특히 중국 등이 고도성장을 위해 다량의 석유를 구매하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다.

미시온은 큰 성과를 거뒀다. 절대적·상대적 빈곤이 모두 줄었고 단지 소득 격차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쿠바 의사들을 대거 초빙해 방방곡곡에 의료원을 설립한 미시온 ‘바리오 아텐트로’일 것이다.

미시온 프로그램의 규모나 성과는 톨라 정부의 빈민 정책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반시장적 개입이 시장에 의존한 것보다 빈곤 퇴치와 복지 확충에 훨씬 더 효율적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우파들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부와 생산수단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차베스가 운영하는 기존 국가 기구는 그런 특권 보호에 헌신해 온 인사들로 가득했다. 베네수엘라 국가 기구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이

윤 창출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베스는 기존 국가 기구의 저항을 피하고자 기존 국가 기구와 독립적으로 미시온을 운영하고 여기에는 지역 활동가와 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다.

실제로 기층 미시온의 경험을 다룬 르포를 찬찬히 읽어 보면 현실적인 지역 활동가들과 구성원들의 눈물 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1970년대 유가 호황기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부나 브라질 톨라 정부의 복지 정책과 미시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앞선 정부들은 대중에게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 준 대신 그들을 수동적 표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2002~2003년 투쟁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한 기층의 에너지와 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시온은 한계도 있다. 미시온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자본주의에 포위돼 있다. 그래서 기층에서 사람들은 미시온을 최대한 이상적 형태로 운영하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자주 좌절했다.

예컨대, 미시온 메르칼은 국가 운영 상점으로 식료품을 일반 상점보다 훨씬 값싸게 공급한다. 그런데 식료품 생산은 사회화돼 있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에 휘둘리는 자본가나 자영업자에 의한 생산이 지배적이다.

그러자 차베스 정부는 처음에는 우유 등 식료품 가격을 강제로 정했다. 그러나 생산 통제가 없는 가격 통제는 생산자의 반발에 직면해 무기력함을 드러냈고 일부 생필품은 품귀현상을 빚었다.

2007년 신헌법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은 대중이 ‘볼리바리스 혁명’에 지쳤다고 보는, 이런 모순이 낳은 효과 때문이었다.

차비스모

차베스 정부의 대응은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었다. 그는 〈포브스〉 선정 2백대 기업 중 하나로 꼽힌 베네수엘라 최대 식료품 업체에서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사들여 미시온 메르칼에 공급했다. 그러나 대중의 불만은 생산의 민주적 통제와 계획을 포함하는 훨씬 급진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차베스는 반자본주의적 대안의 실험 — 노동자 자주관리, 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 등 — 을 시도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예컨대, 그중 가장 급진적인 노동자 자주관리 공장의 경우, 알카사나 인베팔 등 중요한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은 소규모일 뿐이다. 게다가,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장 중 하나인 PDVSA를 노동자 자주관리 사례로 발전시킬 생각이 없다. 2002~2003년 직장폐쇄 당시 이미 기층 노동자들이 그 실험을 했는데도 말이다.

대안적 생산방식 실험이 이룩하지 못하면서 볼리바리스 혁명의 재원은 거의 전적으로 PDVSA에 의존해 왔다. 미시온부터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모두 PDVSA의 수입에 의존한다.

이것은 고유가가 유지된 2008년 여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후퇴하면서 유가가 하락하자 베네수엘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볼리바리스 혁명은 진정으로 갈림길에서 있는 듯하다.

이 갈림길에서 중요한 변수는 다양한 정치로 분화된 차비스모(차베스주의) 내부의 역학관계다. 차비스모 중 정부 운영에 밀접히 연관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은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것을 먼 미래의 과제로 여긴다.

또, 일부는 사사로이 부를 축적하는 데 몰두하면서 ‘볼리부르헤세스’(‘볼리바리스 혁명’이 탄생시킨 부르주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차비스모 관료들은 급진파의 투쟁을 탄압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노동부가 기존 우파 노총에 반대해 나타난 베네수엘라판 민주노총인 전국노동자연합(UNT)의 급진파인 ‘통합적 계급적 혁명적 자주적 경향’(C-CURA)를 종중 탄압한 것이다.

차베스는 사회주의통합당(PSUV)을 건설해서 이런 다양한 조류들 간 토론을 활성화하고 볼리바리스 혁명을 전진시키려 했다. 그러나 PSUV에서 차비스모 관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원래의 목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오늘날 볼리바리스 혁명은 2002~2003년처럼 기층의 움직임이 급격한 전환을 낳은 유동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갈림길에 섰던 혁명이 자체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진정한 반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노동자·민중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김용욱 기자 chatonge@left21.com



무료 병원을 대거 설립한 미시온 바리오 아텐트로 (왼쪽), 2009년 초 개헌 투표 지지를 호소하는 차베스 (오른쪽).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3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화물연대

4월 30일 파업 예고

화물연대가 4월 30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 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송료는 줄어든 반면 기름값은 올라서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운수노조 결의대회에 화물 노동자 3천여 명이 참가한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지금 화주 단체들과 운송사들은 표준운임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업주들의 반발을 거슬러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게 만들려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화물연대가 준비하는 4월 30일 하루 파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물동량 감소와 운송료 인하로 화물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데다, 지난해 박종태 열사 투쟁 이후 정부의 탄압이 심해 하루 파업 그 이상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함께 싸운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해 철도파업이 벌어졌을 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제기 속에서 대체운송을 거부했던 것처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정서도 크다.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공무원

“저항 때문에 정부 정당성도 약화”

이명박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겠다고더니 정작 공무원노조 탄압에는 법도 없다.

가히 ‘토벌전’ 수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탓에 정부의 정당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최근 법원 행정처는 공무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를 삭감하겠다는 행안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신문〉은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대법관 임명 저지운동을 펼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신경질을 냈다. 법원본부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굴복했다면, 법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잃고 수당도 잃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은 또 있다. 광주시노조가 정부의 ‘불법 단체’ 공격 외종에도 운영위와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탄압이 가혹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 서울 도심에서 전교조와 함께 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꾼 것은 매우 아쉽다. 하지만, 광주에서 계획대로 공무원노동자 1만여 명이 모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탄압에 맞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적극적 연대가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5월 15일 광주에서 열 전국노동자대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규모 있는 집회로 만들어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수석부지부장

기아차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를 좌절시키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모든 공장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

4월 초에 공장장 강성훈을 쫓아낸 화성공장 노동자들의 승리는 통쾌하다. 일부 공정 외주화 시도 완전 철회, 생산라인 속도 조절 복원, 산업안전요원 축소 합의 폐기 등 요구 사항 대부분이 관철됐다. 사측은 고소·고발로 구속된 조합 1부 조합원 3명을 4월 말까지 석방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조합 1부의 석방대책위 조합원들은 이 동지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4월 말부터 즉각 잔업거부와 특근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잔독 버리고 있다.

화성공장의 승리는 다른 공장의 투쟁도 고무했다.

4월 12일 광주공장의 현장 활동가들과 대의원 50여 명은 사측의 생산속도 증가와 강제 전환배치에 반대해 집단으로 생산라인에 쇠사슬을 묶고 파업을 했다.

라인을 점거한 지 9시간 만에 사측은 ‘대의원과 인원 합의 없이 라인을 50퍼센트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는



쇠사슬을 묶고 파업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들

약속을 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2공장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공장장이 면직당했다.

소하리 공장에서도 현장 활동가들은 사측의 엔진분야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사측은 정규직 구조조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비정규직 노동자 7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소하리 ‘금속노동자의 힘’ 활동가

들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매일 아침 30~40명씩 모여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투쟁은 현대차 전주공장처럼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함께 싸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 기아차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보면, 경제 위기 때문에 움츠려 있던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건설노조

갈 길을 보여 준 울산 건설기계

건설노조가 4월 28일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연다.

경제 위기로 목수, 철근 기능공,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일자리 부족과 임금 삭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점점 줄어드는 단가에 고달프다. 이 때문에 ‘사업자 연합회’로 조직된 굴삭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울산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다. 덩크, 앞사발이, 굴삭기 등 다양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로 삭감 없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단결해 전면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80군데 넘는 사업주들이 건설노조와 협약을 체결했고, 건설노조 조합원도 늘었다. 건설노조 파업의 갈 길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불만을 통제

하려고 건설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나머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도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적극 설득해 투쟁에 동참시켜야 한다.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숙명여대

일방적 학제 개편을 막아 내다

숙명여자대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제 개편을 학생들이 막아 냈다.

숙명여대 당국은 경상대학 소속인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를, 경영학부는 경영대학으로 독립시켜 세무전공을 신설하고 경제학부는 사회과학대학에 편입시키려 했다.

학생과 교수 들의 소속 단과대가 바

뀌는 등 학제가 크게 바뀌는 일이었지만 대다수 교수와 학생 들은 이 방침을 3월 초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일방적인 학제 개편에 많은 학생과 교수 들은 재논의를 요구했다. 4월 12일에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두 학부 학생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발언했는데, 경제학부 학생회장은 “학생 1천2백명과 동문 9백21명에게서 항의 서명을

받았다. 교수님들은 침묵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장은 9일 동안 항의 단식을 했다.

이런 저항에 밀려 학교 당국은 결국 학제 개편을 1년 미루고 학생들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강보람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힘으로 성과를 낸 이런 사례가 더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중앙대

부당한 퇴학 처분 철회하라

중앙대학교 당국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기어이 학생까지 내쫓았다. 중앙대 당국은 4월 19일 김주식 총학생회 교육국장(철학과 4학년)에게 ‘퇴학’을 통보했다.

중앙대 당국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거짓과 억지로 가득하다.

‘교직원들 다치게 하고 폭언을 했다. 휴학생인데 총학생회 집행부를 한다. 2006년에 근신 4개월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

김주식 씨는 “세 근거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선, 직원에게 폭력·폭언을 썼다는

것은 날조다. 학교 당국이 문제 삼은 3월 22일 학내 집회 때 기자도 상황을 지켜봤다. 학생처 직원이 학생들을 사진 채증했고 이를 발견한 김주식 씨가 사진을 지워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학생처 직원은 사진 지우길 거부하다가 김주식 씨를 때리고 폭언까지 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는데도 중앙대 당국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휴학하고 총학생회 활동을 한 것도 학생들이 논의할 자치기구 문제일 뿐이다.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다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4년이나 지나 다시 징계 근거로

삼은 것도 황당한 일이다.

사진 채증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중앙대 당국은 다른 학생들도 징계할 수 있다. 4월 8일 재단 이사회가 구조조정 최종안을 승인한 날 학생들이 학교 안 공사장 타워크레인과 한강대교 위에 올라 농성하자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타워크레인에 오른 노영수 씨(독어독문과 4학년)는 벌써, ‘공사 손실액 약 2천5백만 원을 갚으라’ 하는 통보를 받았다.

중앙대 당국이 명분 없는 징계를 강행

하는 것은, 대학을 기업처럼 바꾸는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반대자는 내쫓고 짓밟아서라도 두산 재단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징계 위험 속에서도 1천1백 명이 모인 지난 4월 12일 학생총회에서 표석 문과대 부학생회장은 “그동안 학교는 우리 말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다”며 한강대교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전했다.

중앙대 당국은 부당한 퇴학 처분을 당장 철회해야 하고 추가 징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금호타이어

지도부의 배신에 맞선 대안이 필요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굴욕적인” 양보안을 타결했다.

고광석 집행부는 이것을 해고가 철회된 “진전된 안”이라고 말하지만, ‘취업규칙 준수’ 협약서까지 써야 하는 해고 대상자들은 “살아도 산개 아니다.”

높은 찬성률로 파업까지 가결시킨 노조가 도대체 왜 힘 한번 못 써 보고 이렇게 당하게 됐을까?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양보교섭의 늪에 빠진 노조 집행부에게 있다. 고광석 집행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양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광석 집행부는 4월 1일 교섭이 결렬됐을 때도, 4월 9일 사측이 해고를 단행했을 때도 항의 시위조차 조직하지 않았다. 1차 합의를 안을 부결시킨 조합원들의 바람은 무시당했다. 집행부는 또다시 부결된 잠정 합의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최악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정리하고 철폐투쟁위원회’(이하 금해투), 현장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자회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이들은 옮겨도 노조 집행부의 양보 교섭을 비판하며 1차 합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해투 등의 지도부는 투쟁의 구실을 자임하고 아래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못했다. 금해투 동지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고군분투했는지 결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의 “돌파구가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다.

돌이켜 보면,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3월 중순, 금해투는 총회 집회에 2백여 명의 조합원들을 조직했고, 공장 안에서 투쟁을 촉구하는 시위로 벌였다. 금해투 지도부는 이 가능성을 확대해야 했지만, 이것은 더는 지속되지 않았다. 1차 합의안 부결 이후에도 금해투는 조합 사무실 농성만 지속하다 그마저도 중단했고, 금해투 쪽 교섭위원들은 양보 교섭 테이블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해투 활동가들과 금해투를 바라보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사기저하가 생겨났다.

금해투 지도부는 최근 집행부 탄핵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금해투가 투쟁의 구실이 될 바랐던 일부 활동가들에게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 활동가는 금해투 지도부가 “지도권 장악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측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쓰디쓴 교훈을 곱씹으며 지속적으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골리앗 삼성에 맞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겠다”



사진: 이원근 기자

김지윤 삼성 규탄 문화제 참가로 소환장을 받은 전 고려대 출교생

나는 지난 2월 5일 강남역 삼성 본관 앞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최근 소환장을 받았다. 당시 추운 날씨였지만 삼성 하청 노동자들, 백혈병 피해자 가족 등 촛불 1백여 명이 모여 뜻을 함께했다.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경찰이 삼성 본관 앞을 지키고 서서 해산 명령을 줄곧 해냈다.

그 뒤 두 달이나 지나서 경찰은 내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며 두 번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규모가 작은 문화제였는데도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2005년 이견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부터 시작된 삼성과의 악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조 탄압에 앞장선 이견희에게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철저히 돈과 기업을 향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5년 당시 학생 1백여 명이 이견희 학위 수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자 학교 당국은 이견희에게는 머리를 조아렸고 학생들에게는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보수 언론들과 정부 각료들까지 나서서 학생들을 공격했다. 이견희는 일이 커지자 “내 부덕의 소치”라며 일을 무마하려 했다. 곧이어 폭로된 ‘삼성 X파일’은 학생들의 시위가 정당했음을 다시금 보여 줬다.

그러나 1년 뒤, 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주도했던 학생 일곱 명이 출교됐다. 학교 측이 징계 이유로 내세운 것은 본관 뱀سم 시위였지만, 이견희 반대 시위에 대한 보복 징계라는 것도 명백했다.

자퇴한 김예슬 씨가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학 생활에 의문을 가지게 된 세 가지 사건 중 하나로 꼽은 만큼 이 사건은 고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래도 노동자·학생 등 많은 이들의 연대 덕분에 우리는 2년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복학한 후 나는 삼성에 맞서 싸우는 많은 이들과 연대하고자 했다. 출교 철회 투쟁이 승리한 것처럼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솔직히 갑작스런 연행이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수년간 탄압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골리앗 삼성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다윗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윗들이 생겨나 이 싸움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도 곳곳하게 함께 싸우며 승리에 힘을 보태고 싶다.



《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조건준 지음, 매일노동뉴스, 3백10쪽, 1만 5천 원)

투쟁 자제와 고통 분담이 해결책인가

경제 위기 속에 노동운동 안에서도 ‘양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양보론’ 논의의 결정판은 급속노조 현직 간부인 조건준이 쓴 《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다. 이 책은 잠과 일과 술에 찌든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생생하게 그렸지만, ‘선제적 양보’를 “노동운동위기 탈출구”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저자는 “망해가는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제적으로 버려야 한다”며 “어설피게 고용도 지키고 임금도 지키겠다면서 전부를 취하려 하면 전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간단한 셈법으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기업이 가진 돈이 1백만 원이고 1백

명이 1만 원씩 나눠 가지며 살았다고 하자. 그런데 경영이 악화되면서 돈이 50만 원으로 줄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건준의 해법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해 5천 원씩 나눠 가지는 ‘고통 분담’이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잘못됐다. 여기에는 기업주들이 가져가는 엄청난 몫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경영이 악화돼도 부실의 책임자들은 자기 몫을 내놓지 않는다.

예컨대, 금호타이어 위기를 불러온 경영진은 경영권까지 보장 받았고, 쌍용차 부도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는 투자액을 능가하는 이익을 ‘먹고 튀었다. 현대차 정몽구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해고와 전환배치를 시작했다.

왜 이런 자들에게서 이윤을 회수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정부가 기업주들의 손

실을 매워 주는 데 쓰는 돈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대안을 일찌감치 포기한 조건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무리 투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투쟁 자제와 계급 타협을 충고한다.

그러나 호황일 때조차 치열하게 싸울 때에만 사측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더구나 투쟁 없이 고통전가를 막을 수 없다.

조건준의 말처럼 “가질 수 없는데 가지려 하는 것은 집착일 뿐”이라면, 어떻게 1930년대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에게 양보를 따낼 수 있었을까? 당시 노동자들은 단호한 점거파업으로 대규모 사회복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머쥐었다.

조건준은 투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을 겨냥해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고집만 남았다”고 비아냥댄다. 그러나 그가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가 급속노조 간부로서 자칫 미달이라는 점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오늘날 경제 위기에 따른 공격은 강력한 노동자 투쟁을 낳기도 한다. 지난해 쌍용차 파업이 대표적 사례다.

조건준이 펼치는 양보론은 이런 노동자 투쟁에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악적 구실만 했다.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는 “급속노조 지도부의 양보 종용”을 ‘악몽’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공세적 요구와 대안이 절실한 때다. 이런 요구를 성취하려면 투쟁 자제와 양보가 아니라, 노동자 연대와 단결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소금꽃나무》(김진숙 지음, 후마니타스, 2백82쪽, 1만원)

노동 투사의 눈물 어린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책을 가끔 접할 때가 있다. 처음 학생운동에 발을 담그면서 읽은 <전태일 평전>이 그러했고, 얼마 전에 읽은 《소금꽃나무》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어렸을 적 감기에 걸린 내게 엄마가 물에 탄 가루약을 억지로 삼키게 할 때의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내 몸을 휘감는 듯했다.

《소금꽃나무》의 저자 김진숙 동지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의 처녀용접사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돼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고자이자 뛰어난

노동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이 책을 들고 먼저 훑어 보면 그녀가 ‘공순이’에서 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와중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린 노동 열사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즉, 고통지만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 안 되는 ‘현실’을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솔직하고 담백한 필체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당이 좀 세서’ 용접 일을 배우고, 무시 안 받고 살려면 공부가 우선이라 생각해 찾이란 근로야학에서 자신을 ‘노동자’라 소개하는 것마저 부끄러워하던 저자는, ‘뇌수가 터지고 ... 감전사고로 숯덩이처럼 새가말게’ 죽어 나가는 동료들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 주려는 생각에 노조 대의원이 됐다.



<작은 연못>, 2009년, 이상우 감독 60년이 흘러도 지울 수 없는 잔인한 기억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충청북도 산골마을. 전쟁중임에도 “우리 같은 농사꾼들이야”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은 그들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작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미군이 마을주민들을 남쪽으로 피난가도록 유도하고는 ‘즉각 포위’ 명령을 내리고, 쌍굴다리 와 철길에서 이들을 학살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1백32명이 사망했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작은 연못>은 역사 속에 사건을 묻고 은폐하기에만 바빴던 미국과 한국 정부에 맞선 지난

한 투쟁과 요구 속에서 제작·기획됐다.

미군은 당시 “모든 난민이 남쪽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명령하고, 조직적 소개(제거)계획을 입안하라”(8군 본부에서 모든 미군 전투부대에 보낸 명령)는 명령에 따라 피난민을 폭격했다.

영화는 눈앞에서 벌어진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과장 없이 그린다. 별도의 주인공은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 증언과 인터뷰, 자료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두고 주민의 — 특히 어린이어들 — 경험을 생생히 그린다.

한국전쟁 중 학살은 비단 노근리에서만 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우익들은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호들갑을 떠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흘렀지만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고 있다. 영화 <작은 연못>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돼 평범한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잔인한 기억을 남긴 그때를 진심 어린 시선으로 본 영화다.

최윤진

쫓기고, 잡혀가고, 죽어가는 일들이 일상처럼 이어진다고.

그러나 이순신이 직접 못질·대패질하며 거북선을 만든 게 아니듯이, 지금까지 온갖 재화를 생산하고 지켜오며 세상을 만든 건 바로 노동자라고 역설한다.

자신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직업을 ‘노동자’라고 써 내는 당당함을 가르치고 싶다는 저자에게서 질서에 순응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노동자’ 투사를 본다.

이 책은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좋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 감히 일독을 권해 본다.

김영익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

강원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연사: 정병호(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27일 (화) 오후 7시
장소: 강원대학교 석재 5층 생활도서관
참가비: 없음
문의: 010-5094-1917

서울 남부 사회포럼 천안함 사고, 가려진 진실 그리고 북풍

연사: 전지윤(레프트21) 기자
일시: 4월 2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동부 사회포럼 기업가인가 노동자인가 — 누가 세상의 부를 만드는가

연사: 이장구(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
일시: 4월 2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백 원)
문의: 02-447-0397, 010-9372-2746

서울 서부 사회포럼 불황기 정치 경제와 노동자 투쟁

연사: 정종남(다함께 활동가)
일시: 5월 6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2-324-3400, 010-7214-1157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삼성을 생각한다 - 기업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연사: 이종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 전지윤(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13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120주년 메이데이 기념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이주노동자의 삶과 저항

연사: 미셀이주노조 조합원, 이정원(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4월 29일 (목) 7시

장소: 이화여대 ECC B155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6603-2536

세상을 거꾸로 보는 청소년 토론교실 “물구나무”

차별 뚫고 하이킥 #1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연사: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사무국장)
일시: 5월 8일 (토)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8827-0319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②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인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말하는 국익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다섯 호에 걸쳐 실릴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박건희** 기자가 국익 개념의 신화를 들춰낸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국익’이다. 천안함 사고의 증거들을 은폐하는 것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는 것도, 심지어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모두 국익이라는 논리로 설명한다.

정부와 언론은 국익이 바로 국민 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판소리 하지 말고 정부를 따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토록 국익을 위해 애쓰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일까?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일까?

지난 몇 해 동안 한국은 ‘국익’을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파병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중동의 석유 자원 등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파병한 결과는 무엇인가? ‘국위 선양’은커녕 한국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한 전범국으로 전락했다.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와 김선일 씨가 비극적으로 죽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인 23명이 납치돼 두 명이 살해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해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떠한 ‘실리’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와 교육에 써야 할 돈이 파병과 전쟁 지원에 쓰였고, 한국인은 중동 지역에서 테러의 표적이 됐다.

한미FTA를 추진할 때도 지배자들은 국익 타령을 했다. 무역 자유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삶도 나아진다는 것이 지배자들 설명이다.

하지만 한미FTA 조항을 따르면 의약품 값이 오르고, 노동자의 권리는 줄어줄 수밖에 없다. 각종 공공 서비스는 사라지고, 환경 파괴는 가속화할 것이다.

한미FTA로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파병과 한미FTA로 얻은 국익은 누구에게 가는가?

기업주들은 각종 규제 철폐, 노동자 권리 축소, 공공 서비스 파괴 등 한미FTA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업주들의 뒤를 봐주며 국제적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정부는 파병을 통한 군사력 과시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더 우위를 점해 한국 기업들의 시장 개척과 원료 확보, 이윤 창출에 도움을 주려 한다.

계급 분단

그렇다면 왜 국가의 이익은 다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없는가?

그것은 사회가 “적대적인 두 진영” 즉, 다수의 노동자계급 · 피억압 민중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소수의 지배계급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느

한 쪽의 이익은 반대 쪽에 손해가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이익은 기업주의 손해고, 기업주의 이익은 노동자의 손해다. 얼마 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을 얻어 숨진 박지연 씨와 그를 착취한 이 건희의 이해관계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익으로 돈 잔치를 벌인 정몽구와 그에게 해고당한 현대차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는 이런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면 경찰력 투입, 구속 · 수배 같은 방식으로 탄압한다. 결국 이른바 ‘국익’의 실체는 바로 소수의 기업주들을 비롯한 이 사회 지배계급의 이익이지 결코 다수 노동자 ·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국익론은 이런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약한 논리다. 마치 계급 분단이 존재하지 않는 양,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통 이익이 있는 양 속이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국익이란 거짓말로 노동자 대량해고, 파병 같은 온갖 악행을 밀어붙인다.

촛불시위나 노동자 파업 같은 대규모 저항이 벌어지면,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 국가 발전에 저해된다’며 ‘국민 화합’이 필요하다고 난리다.

지배계급이 이런 가증스런 논리를 쓰는 것은 경찰, 군대 같은 물리력만으로 노동자 계급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익론은 노동자들이 국가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과 ‘운명 공동체’라는 착각을 하게 해 지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익론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IMF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 극복’을 해야 한다고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금 모으기에 나섰다. 온 나라를 태극기로 도배하고 애국심 좀 가지라고 했다.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극심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로 직장을 잃고 빈곤층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반대로,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져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부자들만 배 불리고 있다.

계급적 관점

국익을 들먹이는 정부의 공격 시도에 제대로 맞서려면 국익이라는 이데올로기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전체 국민의 공통된 이익이 있다는 관점을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지배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파병을 통해 해외 자원을 많이 얻으면 이는 국익인가? 한미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면 진보진영은 이를 환영해야 하는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익은 우선 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는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

국익 논리를 수용하면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렵게 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다.

세계의 분단선이 가로로 그려져 있다는 간단한 사실 때문에, 국익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관점이 필요하다. 계급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

논설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파업건수는 전년 대비 38.5퍼센트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113.8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의 패턴을 보여 준다. 즉 노동자 투쟁이 쉽게 다발하지 않는 대신 훨씬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올해 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량해고 계획을 저지한 반면, 금호타이어 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투쟁 회피와 배신적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며 전진하고 있는 반면,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은 집중 탄압과 연대투쟁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저들과 우리 어느 한 쪽도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는 일진일퇴 상황이다. 다시 말해 우리 편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와 사측의 공세를 완전히 물리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크게 기울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4월 28일 건설노조의 하루 파업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4월 30일에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5월 중순에는 공무원노동자와 전교조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일진일퇴

그런데 경제 위기 시기에 대부분의 노동조합 투쟁이 승리하려면 전투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투쟁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바키예프가 물러났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이 이번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반란을 설명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 반란의 근본 원인은 바키예프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분노가 반란의 기폭제였다.

타이에서는 거대한 붉은 셔츠 운동이 일어나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붉은 셔츠 시위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점거했고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물리쳤다. 지금 타이 군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진정한 파업 운동이 일어날 듯하다.

온데간데

한국에서도 경제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 또한 심각하다.

4대 총단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은 반발에 부

이는 불황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굵직한 주제와 연관돼 있다. ‘노동운동 위기론’과 ‘선제적 양보론’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간부 조건건은 “어설픈게 고용도 지키고 임금도 지키겠다면서 전부를 취하려 하면 거꾸로 전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한다(«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고 말한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는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고통 분담안에 참가해야 한다”(«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들의 주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 역시 위기에 처해 있고 따라서 수세적 상황에 걸맞는 수준의 자기 제한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조금치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싹을 죽이는 양보와 투쟁 회피 논리에 맞서 현장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해야 한다. 이때 올바른 ‘정치’가 핵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의 조직이 있는 곳곳에서 저항을 선동해야 한다. 투쟁의 부활 없이는 노동자 계급이 경제 위기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정치를 투쟁의 한 복판에 가져가면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준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고무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 시대에 개혁은 노동자 대중 자신의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을 위해 싸우는 최상의 투사여야 한다. 또,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치’와 만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뒤흔쳐 지금 온데간데없다.

MBC 장악 기도도 지금 MBC 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천안함 침몰은 정부와 군대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파들은 북한 관련설을 흘리며 어떻게든 사태 파문 확산을 막으려 한다. 연초에 남북정상회담설을 흘리던 정부가 이제는 북한 위협설을 꺼내두고 있는 것이다.

오죽 다급했으면 납파 간첩 사건 같은 고전적 수법마저 꺼내들며 북한 위협설을 험박할까. 그러나 그럴수록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될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비록 불균등하지만, 노동자 운동의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안몰이’를 강화하는 것도 노동자 투쟁 예방을 위해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집권당은 지방 선거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그렇기는커녕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립분산적이지 않고 단결해 싸운다면, 이명박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투쟁의 성패 여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목: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의 현지 취재

“기후변화 멈추려면 자본주의에 맞서는 전쟁 벌여야”

4월 19~22일에 열린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를 〈레프트21〉 장호중 기자가 현지 취재했다. 〈레프트21〉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 더 많은 소식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가 4월 20일 볼리비아 코차밤바 외곽의 티키퍼야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이 열린 축구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참가자 2만여 명으로 북적였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가 실패로 끝난 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민중회의를 열자고 호소했고 수많은 환경단체들과 사회운동 단체들, 토착민들이 호응해서 이 회의가 성사됐다.

여러 나라 정부 대표단도 회의에 참가했고 유엔 대표단도 개막식에 참가했지만 그들이 이 회의의 주역은 아니었다. 오히려 개막연설에 나선 유엔 대표단을 향해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칠레에서 온 한 여성은 “그들이 잘난 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설교하겠다는 거냐.”

주역

이 여성 활동가 말대로 회의 참가자들의 압도 다수는 라틴아메리카의 청년, 원주민, 학생이었다. 그동안 국제정치에서는 물론이고 환경운동이나 기후변화 운동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운동의 주역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계 다섯 대륙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은 크게 환영 받았다.

미국 원주민 대표는 연단에서 남반구 원주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냈다.



2만 명이 결집한 개막식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대지의 권리를 위해 싸웁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참가자는 선진국들과 기업들에 맞선 기후정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볼리비아 세계민중회의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민중이 기후변화를 멈추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들이나 강대국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볼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 대안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야말로 우리 삶과 기후를 망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온 참가자는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신자유주의와 친기업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친기업 정책에 반대합니다. 인도에 사는 사람들 중 90퍼센트는 기후변화에 아무 책임

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파괴적인 개발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민중은 남미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다른 곳의 민중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선택

대륙별 참가자들의 연설이 끝나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다.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선 모랄레스 대통령은 코펜하겐에서 선진국 정부들이 보여 준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코펜하겐 회의 실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게 생겼습니다. 모든 일이 자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한 자본주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과 조

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다양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이윤을 위해 여기저기서 벌이는 전쟁과는 다릅니다.”

코차밤바 회의는 22일까지 계속된다. 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런 결정이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차밤바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코펜하겐 회의 이후 급진화한 기후정의 운동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코펜하겐에서 등장한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는 구호는 이제 코차밤바 민중회의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듯하다.

이제 기후정의 운동은 10년 전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직면했던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가 됐다.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면 어떤 체제인가, 체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운동총회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건설해야

개막식이 열리기 하루 전 같은 장소에서 사회운동총회가 열렸다. 사회운동총회는 국제 농민단체인 비아캄페시나와 남반구초점 등 이전에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이끌던 주요 단체들과 원주민 단체들의 발의로 개최됐다.

비아캄페시나 의장은 나라마다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나라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농민, 교사, 공무원, 환경단체 등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공통의 의제를 만들고 칸쿤에서, 다른 곳에서 시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8월에는 올해 말에 멕시코에서 열릴 유엔기후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를 열 것입니다. 50~60개 나라가 이 회의에 참가할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 기후정의 운동과 멕시코의 지역적 대중운동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국 ‘기후변화반대운동’ 활동가 조너선 닐은 “칸쿤 시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동안 NGO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GO들도 정부들을 비판합니다.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환경운동은 더 많은 사회운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원주민과 함께, 비아캄페시나 같은 농민과 함께, 노조와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관련기사 9면)

아쉽게도 사회운동총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한편에서는 급진화한 환경운동가들과 자율주의자들이 주류 환경운동과 거리를 둬으로써 급진적 정서를 대변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 환경운동의 온건 개혁주의적 정치를 대체할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논의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듯하다.

www.marxism.or.kr

맑시즘2010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7월 22일(목) – 25일(일) 서울

10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진보 포럼
60여 개 포럼과 열린 토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내외 저명한 활동가와 진보적 학자·저술가들의 강연

국내외 뜨거운 현안과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포럼들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석 토론

1천5백여 명의 진지한 참가자들이 어우러지는 나흘간의 정치적 축제

동아리·노동조합·학생회의 동료, 친구, 가족에게 ‘맑시즘2010’을 널리 알려 주세요.
혼자라도 망설이지 마세요. ‘맑시즘2010’에서 대안을 찾는 수많은 벗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참가 신청하세요!

참가비
하루_ 1만 3천 원(22일만 7천 원)
나흘_ 4만 원
할인_ 대학생은 25퍼센트,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는 약 60퍼센트 할인합니다.(나흘 기준)

참가 신청·문의 02-2271-2395

웹사이트 www.marxism.or.kr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 다함께